



“우리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등록금을 동결하라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IMF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데도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등록금은 45.3퍼센트나 올랐다.

그래서 등록금 부담 때문에 군입대를 하거나 휴학한 학생들은 복학하면 그 사이에 등록금이 수십만 원씩 올라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7백만 명 이상이 월수입 1백20만 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빚을 내지 않으면 자녀를 대학에 보낼 엄두를 못 낸다.

이번 학기에만 전체 대학생의 14퍼센트나 되는 31만 명의 대학생들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대학생들은 돈을 빌려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10년 이상 동안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가불인생'을 살고 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는 거의 필수가 됐다.

그런데도 주요 사립대학들은 매년 물가인상률의 두 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왔다. 올해도 10퍼센트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지어 학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살하는 등의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은 '우리를 현금인출기로 여기는 강도 짓'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학교 발전을 위해 서로 희생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가 희생해왔는가. 사립대학 재단이학교를 위해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

대학 재단들은 현행법이 정해놓은 의무사항인 법정 전입금마저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 사립대 재단의 65퍼센트가 최소한의 법정 전입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내고 있다. 심지어 재단이 전입금을 한 푼도 안내는 대학도 전체 사립대학의 16퍼센트에 달한다. 전체 대학 운



3월 22일 연세대학교 학생총회 - 2천2백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항의했다

영비에서 재단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퍼센트 대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및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5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대학 재정을 학생들 등록금으로 마련해온 셈이다.

사립대학 재단에 돈이 없다는 변명도 순전한

거짓말이다. 이미 주요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매년 올리면서, 기부금과 등록금을 모아 엄청난 규모의 이월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2005년 현재 대학들이 쌓아놓은 이월적립금을 다 합치면 5조 3천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매년 약 1조씩 새로이 적립되고 있다. 이화여

대의 경우, 무려 6천108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가지고 있다. 이 액수면 적립금의 이자만으로도 매년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을 정도다.

최근 대학들은 이 적립금으로 주식투자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조건 개선 등에 쓸 수 있는 돈을 재단의 재산 불리기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화여대와 연세대는 삼성증권과 손을 잡고 'YES 아카데미펀드'라는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아카데미펀드도 모자라, 1000억 원을 삼성투신운용 등 자산운용사 5곳에 맡겼다.

이에 질세라, 고려대도 최근 "자체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국립' 서울대학교도 주식연계증권(ELS)에 투자하고 있다. 즉, 한국의 대학생들은 단기적 이익에 눈 먼 투기꾼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대학 재단들이 대학을 돈벌이 장소로 이용하면서 학생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수천억 원의 재산을 모아놓고도 또다시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대학 재단에 맞서, 강력한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등록금을 동결하라!"

노무현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지켜라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는 GDP대비 6퍼센트를 교육재정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재정은 GDP대비 4.28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이 수치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보다도 낮아진 수치다.

반면, 노무현은 MD(미사일 방어 체제)에 필요한 PAC-3형 패트리엇 미사일 48기와 이지스함 3척을 구입하는 데에 22조원이 넘는 돈을 썼다. 게다가 노무현은 이라크 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다.

OECD 국가들이 평균 고등교육비의 78퍼

센트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국가부담은 겨우 1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재정 6퍼센트 확충 약속만 지켜도 등록금 70퍼센트 인하가 가능한데도,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정부와 학교당국은 언제나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만, 교육재정을 확충할 재원은 충분히 있다. 작년 한 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평균 1억이나 증가했고, 4대 재벌 순이익이 20조에 달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으면 등록금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 군비 지출에 쓰이는 돈 중 20조 원을 교육에 투자해도 전체 대학생의 5분의 1이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 자신이 부자들의 이해관계에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노무현은 전쟁과 파병에도 앞장서고 있는 장본인이다.

따라서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운동은 정부의 전쟁 지원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운동과 결합되어야 한다.



프랑스 학생들처럼 싸워야 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의 불만도 하늘을 찌를 듯하다. 올해도 각 대학마다 수백~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이미 연세대·이화여대 등은 학생총회가 성사되기도 했다. 특히 이화여대는 바로 어제 13년 만에 학생총회가 성사됐다.

학생들의 투쟁이 조금씩 달아오르자, 이 사회의 권력 집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프랑스 학생들 못지 않게, 한국의 학생들도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거대한 저항에 나선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류 언론들은 은근히 투쟁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학본부 점거와 수업 거부 등 다소 과격했던 등록금 투쟁 방식이 요즘은 조용하고 평화적이면서도 시선을 더욱 잡아끄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 달라진 등록금 투쟁은… 학교 쪽으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연합뉴스》 3월 13일치.)

그러나 등록금 동결을 약속한 대학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애초의 등록금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대학들도 있다. 사립 대학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따라서 학생총회 후에도 이쯤하면 되지 않을까 하며 멈추지 말고, 투쟁을 더욱 확대해

야 한다.

예년에도 학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면서 여러 대학에서 적게는 1천 명에서 많게는 4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학생총회가 성사된 바 있다. 이런 대학 중 일부는 대학 당국의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양보가 미미한 것이거나 아예 학생총회 성사 수준의 압력으로는 대학 당국이 양보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양보를 받아 내려면, 총회 성사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

학생총회에 모인 수천 명의 힘을 결집해 대학 당국을 강력히 위협하는 직접 행동—대학 행정 기관의 업무 마비를 노린 대중적 점거 농성이나 동맹 휴업 등—이 결합돼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대학 당국에 가장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대학 행정 시설을 점거해 학사 행정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 학생회 간부 중심의 점거로는 큰 압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대중적 지지와 참가 속에 이러한 행동이 조직돼야 한다.

연세대 학생들은 지난 3월 22일 2천2백 명이 참가한 학생총회 직후 하루 동안 본관 건물을 점거한 데 이어, 29일 또다시 총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대학으로 확대돼야 한다. 또한 점거는 상징적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사 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확대돼야 한다.

2000년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단호한 투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줬다. 2000년 등록금 투쟁은 3월 22일 경희대에서 시작된 점거 농성이 끈이어 12개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으로 확대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해 대학 본관 점거 농성은 학사 행정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는 단호함을 특징으로 보여 주었다. 이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부분적인 양보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 프랑스 학생들 또한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 법안과 유사한 최초고용계약법에 반대하는 단호한 대중 투쟁을 건설하고 있다. 거리 시위·점거농성·동맹휴업 등이 결합되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도 프랑스 학생들처럼 싸워야 한다. 학생총회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더 큰 투쟁을 건설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각 대학에서는 점거농성·동맹휴업 등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소수 지도부 중심의 농성이 아니라, 4월 초부터 도심 거리 시위를 더 큰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학생 연대가 효과적이다

프랑스 학생들은 또한 노동자·학생들의 연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투쟁은 노동자 파업을 자극해, 3월 28일 300만 명이 참가하는 대중 파업과 거리 시위로 확대됐다.

한국에서도 4월 6일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민주노총 파업이 예고돼 있다. 이 투쟁이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과 결합된다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금 문제는 단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등록금 인상은 노동 계급 생활 수준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다. 따라서 두 쟁점을 결합시킨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가령 민주노총 파업에 맞춰, 학생들도 동맹 파업(동맹 휴업)을 조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 서울대 활동가들이 조직하는 동맹 휴업이 우연히도 민주노총 파업 날짜와 맞아 떨어졌다. 동맹 휴업이 실질적으로 조직되어 두 가지 투쟁이 결합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4월 대학 맑스주의 포럼

참가비: 1천 원(티켓을 한 번 구입하시면, 4월포럼 전체를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10-2752-2003

21세기 사회주의

연사: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마르크스주의 연구》편집위원장)
● 4월 27일(목) 오후 7시30분
서울대 자연대 28동 102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듣는다

우리가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연사: 성향애(공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전지윤(다함께 노동담당기자)

- 4월 5일(수) 오후 6시30분
이화여대 포스코관 359호
- 4월 13일(목) 오후 6시30분
고려대 문과대(서관) 316B호

차베스,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의 혁명

연사: 이수현(《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역자)
● 4월 20일(목) 오후 6시30분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305호

동성에 억압이 사라질 수 있을까

연사: 곽이경(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교육위원, 동성애자인권연대 전 사무국장)
● 4월 5일(수) 오후 6시30분
건국대 문과대 306호

여성해방과 마르크스주의

● 4월 6일(목) 오후 6시30분
경희대 문과대 304호

